

光日春秋

김민영



지난 4월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교운영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규제해왔던 29개의 지침을 폐기하고 개별 학교가 알아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행으로 되돌리자는 조치이며, 학생들을 획일적 입시경쟁으로 몰아가는 입시몰입 정책에 다른아님을 알 수 있다.

학교자율화 조치 과대포장 말라

하면 'SKY 입시반' '특목고 준비반'을 만들자는 요구가 왜 안 생기겠는가? 그런데 '우반'에 들어가면야 좋겠지만 모든 학생이 우반에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때때로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이 앞장서서 학교발전기금을 학교별로 할당해서 수천만원씩 걷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지침'마저 사라지면 촌지와 찬조금은 매우 '자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교로 돌아간다고 한다. 어린이신문 강제구독을 금지하던 것도 규제를 풀면 한 달 구독료 3천500원 중 600원 정도가 학교로 돌아온다고 한다.

단언컨대 '학교 자율화'는 그 포장과 달리 알맹이는 학생들을 혹사시키고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교사들에게는 양심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불량정책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 亞 '비엔날레 전쟁'서 최고 굳혀라

올 가을 아시아에선 총성 없는 미술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오는 9월 제7회 광주비엔날레(9월 5~11일 9일)를 시작으로 아시아에서만 7개의 대규모 국제 미술행사가 연이어 열리기 때문이다.

올 가을 아시아에선 총성 없는 미술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오는 9월 제7회 광주비엔날레(9월 5~11일 9일)를 시작으로 아시아에서만 7개의 대규모 국제 미술행사가 연이어 열리기 때문이다.

올 9월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국제 미술행사는 요코야마트리엔날레를 비롯 상하이비엔날레, 싱가포르비엔날레, 타이베이비엔날레, 광주우트리엔날레가 있다.

문화예술은 21세기 지역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이미지를 고급화시키고 사람들을 단시간에 끌어들일 수 있는 최고의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광주비엔날레의 최대 라이벌인 상하이 유럽의 스타급 매니저 2명을 공동감독으로 선정하고 바람몰이에 나서고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 비엔날레 전쟁'에서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야 한다. 지난해 '신ington 총감독 파문'으로 한때 흔들리기도 했으나 치밀한 전략을 세워 아시아 대표 비엔날레로 우뚝 서야 하는 것이다.

개최일까지는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은 비판 보다는 대화의 성공 개화를 위해 광주시, 지역문화예술단체,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서비스수지 적자 2년 연속 세계 3위라니

우리나라의 지난해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205억8천만달러로 지난 2006년 189억6천만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시급하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국내인들이 지갑꺼낼 해외에 나가 외화를 평평 쓰면 국내 서비스산업은 살아날 수 없고 국가경제도 위협 받게 된다.

서비스수지 적자 폭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보아도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일본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3위에 올랐다.

정부는 오는 28일 서비스산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적자 규모가 큰 관광과 교육을 비롯 의료, 레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적자 대부분은 관광과 교육서비스 때문이다. 수출로 어렵게 벌어들인 외화를 해외여행과 골프관광, 유학·연수 등 교육비로 까먹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규제 완화의 폭과 내용이다. 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난 규제와 과중한 세금이 해외관광을 부추긴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기고



신정훈

최근 '경제효과 부풀리기 의혹'으로 시작된 혁신도시 문제가 지방의 거센 저항을 거치면서 '보완해서 계속 추진' 수준으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다.

면 담당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행정기관부터 민영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가 내세운 혁신도시 재검토의 근거는 논리는 또 어떤가?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을 지켜라

면서 수도권과 지방을 고루 발전시키자는 목적에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이 들어설 부지에 대해서는 '초장기, 초저리 국가 임대산단' 조성이라는 대안을 마련중이라 문제될 일이 아니다.

이 정책은 지역간, 계층간 이해관계가 상충된 부분에 대해 여·야 합의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한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확정했다.

가족동반 이주할 공기업 임직원수를 부풀렸는데 나주시로 이전할 혁신기관이 2007년 3월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가족 동반하여 이사하겠다는 직원이 47%, 여건이 개선되면 하겠다는 직원이 78%로 2005년 비해 임직원의 지방행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 이게 새 정부의 중요 정책인 '공기업 민영화'와 정면으로 대치된다. 공기업을 민영화 시키면 정부 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지방이전을 강제할 수 없고 그렇다고 민영화를 포기할 수는 없고, 이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이제 결론은 확실하다. 현명한 정부라면 공기업 민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포기하고 특별법에 명시된 정부의 의무, 즉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즉각적이고 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한국전력을 민영화하여 특정기업이 인수했다고 가정해보자. 외국의 예에 보듯 전기요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상될 것이고 농업인을 비롯한 영세사민들의 허리만 한층 휠게 된다.

이제 결론은 확실하다. 현명한 정부라면 공기업 민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포기하고 특별법에 명시된 정부의 의무, 즉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즉각적이고 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부동산 계약 때 당사자간 반드시 계약서 확인을

부동산 중개업자가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때먹고 달아나는 사기 사건이 종종 일어난다.

세입자로부터 전세금 1억원을 받은 중개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이 아닌 월세로 계약했다며 월세금 1천만원만 준다.

예를 들어 어떤 집 주인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세 임무를 맡겼다고 하자. 부도덕한 중개업자가 세입자와 1억원을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파트가 아닌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전세를 얻는 서민들은 명심해야 한다. 중개업자를 전적으로 믿을게 아니라 반드시 집주인과 직접 대면해 계약해야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기고



조경성

자연 여건을 활용한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동북아의 숨겨진 진주라 불리는 광양만권은 화학·철강 등 중공업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3대 물류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어 허거나 시간 제약이 있는 일을 대신해주는 기관이다.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의 애로사항에서 시험, 해외 진출까지 다양한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지역기업 해외 진출엔 컨설팅 먼저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광양만권의 기존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남서해안의 해양 및 농업·생물 자원에 대한 연구개발과 산업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치와 및 수출을 위해 인증에 필요한 임상시험을 제공한다. 또한 남해안을 따라 오리엔트조선과 SNC해양조선 등 조선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에 적합한 기능성 페인트의 시험, 기술을 지원하여 원재료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등 지역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산업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많이 구축됐으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어려웠기에 아직은 구축된 인프라와 기업 간에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지 못해 인프라도 자립이 어렵고 기업이 성장하는데도 큰 역할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KTR은 매년 2만개 이상의 국내외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시험·컨설팅 기관으로 오는 25일 전남지역 기업을 근접 지원하기 위해 광양만권지원의 문을 연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민간 성격의 기업 지원 기관들이 직접 기업 지원에 나서 기술개발, 산업화, 고부가가치화 등을 이뤄 구체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광양만권과 울산지역은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부품 등 산업 여건이 유사하지만, 울산시는 KTR을 유치해 기업과 KTR이 동반 성장하는 성공 모델을 정착시켰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은 올해로 39년이 된 시험·컨설팅 기관으로 미국의 UL, 독일의 TUV 등 국제적인 시험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이 유럽에 진출할 때 계약이 되는 CE인증을 쉽게 해결해 주는 등 기업이 힘들

한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온라인 취업서류 양식 통일했으면

요즘은 취업지원 서류를 대부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글씨로 쓰지않고 우편으로 발송하지도 않는다.

류 중에 이력서는 제대로 왔는데 자기소개서는 알맹이가 없고 양식만 덩그러니 새로 보내라는 연락을 받은 적도 있다.

하지만 회사마다 너무나 양식이 달라 불편하다. 회사의 업종과 전략 비전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작성해야 할 내용이나 순서가 다른 것은 이해한다.

이 단편 회사는 특정 항목의 내용을 적게 적으면 단어 숫자를 인식해 저장이나 전송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無等鼓

한우에 등급이 도입된 것은 1995년부터다. 처음에는 4단계였으나 2004년 1+가 추가돼 1+, 1, 2, 3 등급의 5단계가 됐다.

개방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으로 고급육 생산을 꼽고 있다. 과거 LA 갈비가 대거 수입됐을 때에도 고급 품질의 한우 소비는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우에 등급이 도입된 것은 1995년부터다. 처음에는 4단계였으나 2004년 1+가 추가돼 1+, 1, 2, 3 등급의 5단계가 됐다.

그러나 고급 한우를 생산하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일손도 많이 가고 곡물 배합 비율을 달리하는 등 까다로운 노후가 요구된다.

한우에 등급이 도입된 것은 1995년부터다. 처음에는 4단계였으나 2004년 1+가 추가돼 1+, 1, 2, 3 등급의 5단계가 됐다.

이제 쇠고기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한우가 미국산 쇠고기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급육 생산에 주력해야 한다.

한우에 등급이 도입된 것은 1995년부터다. 처음에는 4단계였으나 2004년 1+가 추가돼 1+, 1, 2, 3 등급의 5단계가 됐다.

다. 1+ 등급을 받은 경우는 7.5%에 불과했다. 그나마 지난 2004년 1.3%에 비해 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축산농가들이 고급 품질의 한우 생산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1등급 한우

Table with 2 columns: Product Name and Price/Info. Includes items like '1등급 한우' and '1등급 한우' with prices and contact info.

Table with 2 columns: Product Name and Price/Info. Includes items like '1등급 한우' and '1등급 한우' with prices and contact info.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Section Name and Content. Includes '光日日報' and 'The Kwangju Ilbo' with contact and subscription info.